



보 도 참 고 자 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일시	2022. 8. 23.(화)		
담당 부서 <총괄>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장	오진희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김지나	(044-202-3123)

수원 세 모녀 사건 계기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 점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급 이력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어 지원토록 협의 추진 -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운영,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등 개선
- 수원 세모녀 사건 계기로 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점검 및 보완 대책 수립 예정
- 특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상 수급 이력이 없는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안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14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복지 3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왔다.

○ 가장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 하는 맞춤형 급여체제로 개편하고, 긴급복지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급여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사각지대에 대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소득·재산 기준 완화, 긴급지원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 강화(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로 긴급지원 실시 가능) 등

○ 또한,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을 구축('15.12~)하여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하고 발굴대상자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는 등 상시적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매 2개월마다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34종 위기정보 입수대상자 약 450만 명 중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약 18만 명을 선별, 지자체에 통보

* 그간('15.12~'22.7) 약 458만명을 지자체가 조사하여 약 188만명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전체 위기정보 입수대상자(약 450만 명)를 지자체에 제공, 자체 발굴에 활용 (연 1회 이상 지자체 자체 발굴 의무화)

○ 더불어, 읍면동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확충하였다.

□ 그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 해당 세 모녀는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으나**,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제공한 34종의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건강보험료 체납(16개월) 및 중증질환, 채무 등

-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화성)에 담당 공무원이 방문 하였으나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에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지자체가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세 모녀 사건을 언급 하며 “복지정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 “중앙 정부에서는 이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런 일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으 로서 어려운 국민들을 각별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복지 사각 지대 발굴·지원체계를 재점검하여 안타까운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우선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이번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범정부적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 내일(8.24)은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당 사건 등을 포함 하여 현재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금요일(8.26) 보건복지부 제1차관(조규홍)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 국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하여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로 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연락처 연계, 복지정보 안내 및 홍보 강화 방안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와 동시에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선과 복지정보 안내·홍보 강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9월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고,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
- 또한,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22.9~)과 함께 복지멤버십 가입 대상이 전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복지정보를 사전에 안내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때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조규홍 제1차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고도화와 지자체 복지 전달체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였다.
-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복지멤버십과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용한 상담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며,
-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안부 등과 협의하는 등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요

2. 질의응답

담당 부서 <총괄>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	책임자	과 장	오진희 (044-202-3120)
		담당자	서기관	김지나 (044-202-3123)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급여기준과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1810)
		담당자	사무관	임현묵 (044-202-3144)
담당 부서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기획과	책임자	과 장	장은섭 (044-202-3160)
		담당자	사무관	백승대 (044-202-3172)
담당 부서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	책임자	과 장	민영신 (044-202-3051)
		담당자	사무관	전인수 (044-202-3058)

붙임1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개요

□ 발굴시스템 개요

- (경과)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 시스템을 구축(15.12~)
- (운영방식) ①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통계 분석하여 조사대상자* 선별하여 지자체에 통보 ②위기정보가 입수된 전체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지자체의 사각지대 발굴 지원(20.5월~)

* 회차별(2개월 주기) 약 450만명의 정보 수집 대상자 중 고위험군 18만~20만명(상위 2~3%)을 지자체에서 조사

- (정보입수) 단전, 단수 등 18개 기관으로부터 34종의 정보를 입수, 총 건수는 회차별 약 450만명 수준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업무절차

-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발골시스템 연계 주요 정보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각호 및 제2항)		근거 : 시행령(제8조제2항 별표 2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 ¹⁾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소방청
		재난 피해	행정안전부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 ²⁾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개발공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보료 부과내역			
기초수급 탈락·중지	보건복지부	고용 위기 ³⁾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신용정보원	방문건강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통신비 체납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영양플러스 미지원	
		전기료 체납	한국전력공사
		자살고위험군	자살예방센터
		내원사유 자해·자살	응급의료센터
		휴·폐업자	국세청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행정안전부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기준금액 이하

③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④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④ 일용근로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⑤ 산재요양종결 후 근로단절자

붙임 2

질의응답

1.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기준(변수)에 건강보험료 연체가 포함되는지?

- 건강보험료 연체정보는 현재 입수되는 위기정보 34종에 포함되는 정보입니다. 세부입수 기준은 건보료 월 1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 납기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상 체납입니다.

2. 건강보험료가 16개월 연체되었는데, 정부(중앙)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었는지?

- 건강보험료 연체정보 단독변수 보유자로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 * ('22년 3차 기준)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5,441천명 중 중앙발굴 123천명 발굴 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체납정보 입수자는 1,014천명임.
 - 복지부가 제공하는 전체 위기정보 입수자 명단에 포함되어,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체 발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건강보험료 장기 연체자(1년 이상)에 대해 지자체 발굴역량을 고려하여 기획발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재 입수되는 위기정보 34종은 무엇이며, 올해 9월 추가 예정인 5종은 무엇인지?

- 현재 입수되는 34종의 위기정보에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금융연체, 통신비 체납 등이 있으며,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15.12월) 이후 입수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습니다.

* 입수정보 확대 : ('15년) 18종 → ('17년) 26종 → ('19년) 32종 → ('21년) 34종 → ('22.9월) 39종

- 올해 9월 신규 확대되는 입수항목 5종은 ① 중증질환 산정특례, ②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③ 장기요양 등급, ④ 맞춤형 급여 신청, ⑤ 주민등록 세대원이 해당됩니다.

4. 복지멤버십이 도입되면 위기가구 발굴에 있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신청방법은?

- 복지멤버십은 가구원의 출산·사망, 소득·재산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수시 또는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현금성 급여를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는 정보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어,
- *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
- 복지멤버십을 통해 국민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으로 가입 가능합니다.